

■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동행 해보니...



미국산 쇠고기 등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광주의 한 구청 단속반이 25일 음식점에서 주인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수증 확인·맨 눈 검사로 '끝'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따른 먹을거리 불안해소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모든 음식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도 등 단속반은 다음달 초부터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관련기사 3·4·7면〉
하지만 단속현장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미국산 쇠고기 등이 수입될 경우 원산지 단속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일보가 25일 광주 한 구청 단속반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3만 9천960곳의 대상업소 중 8곳의 음식점 및 식육점 계도·단속현장을

2명이 식당 800여 곳 단속 역부족 한우 유통과정도 명확히 증명 안돼

돌며 원산지표시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짚어냈다.

〈서류·육안검사에 의지〉=이날 오전 10시 광주 한 음식점. 단속 공무원 2명은 주인 A모(42)씨에게 '정육거래 명세서'와 메뉴판을 넘겨받은 뒤 비교하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일치했다.

한우의 진위 여부를 육안으로 판별한 뒤 업소현황과 지도·점점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식육원산지 점검표를 작성했다. 단속 시간은 모두 30분. 단속 결과 8곳의 업소는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매출 비교, 쇠고기유통 역추적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명세서와 메뉴판 비교 분석에만 그쳤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음식점 주인이 진열대엔 한우를 올려놓고 실제 요리 댄 수입산으로 둔갑

시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한우 진위 여부 판별작업도 미흡지 않았다. "이것이 한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단속반은 "육안으로 식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유전자(DNA)검사는 육안으로 살펴본 뒤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시료 값이 80만원(1년 예산)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DNA검사 담당자(시 보건환경연구원)도 1~2명에 불과하며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파악한 광주·전남지역의 원산지표시제 단속대상은 모두 3만9천960곳. 하지만 단속인력은 각 구청별로 2~3명 뿐이다. 현장단속에 나서는 구청직원들만 탓할 수 없는 이유다. 다음달 초부터 단속 대상이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로서도 방법이 없다. 한 구청 직원은 "우리 구의 경우 100㎡ 이상 음식점만 해도 800곳인데, 혼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고 고충을 털어냈다.

◇유통과정도 문제=단속반은 이날 오후 2시 북구 오치동 A유통업체를 찾았다. 유통과정을 역추적해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한 식당 원산지표시제 단속과정에서 본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A유통업체를 방문한 결과, 한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도축장에서 나온 한우의 유통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우임을 증명하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받더라도 도축장에서 판매처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 어느 중간유통업체나 식당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는지 알 수 없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시장에서 미국산 불고기용 고기를 구입한 뒤 한우를 조금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경우 어느 손님이 이를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미 쇠고기 고시 강행

오늘 발효·합의문 공개 ... 야당 강력 반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25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함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 5월 29일 확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

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등이다.

정부는 또 이날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미국측 서한,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 합의문 추가 지침서(국·영문) 등을 공개했다.

미국측 서한은 미국이 한·미 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자율결의'로 규정하면서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출을 보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공개된 미국 측 서한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 규정된 것과 관련, "양측 간에 시한을

정해 합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날 공개된 서한에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서명된) 서한을 보내오는 즉시 공개하겠다"면서 "서명된 서한과 서명되지 않은 내용이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쇠고기 고시를 강행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는 장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행정 절차법에 따라 예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시 강행 항의 청와대 앞 시위 국회의원 등 30명 연행

25일 오후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에서 시민 100여명이 미국산 쇠고기의 장관 고시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며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39)의원을 포함, 시민 30여명이 강제 연행됐으며 초등학생 6학년생인 정모(12)군도 연행됐다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계 차로를 점거하고 농성하던 시위대를 인도 위로 밀어 올렸으며 저항하던 시위대 18명을 1차 연행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 거세게 항의하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여경 5명에 의해 경찰버스에 태워졌다.

이 의원은 경찰버스 안에서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이 의원이 스스로 호송차에 타겠다고 했다"며 강제 연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제53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6월 29일(일)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제인, 제53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열정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일보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문화예술의 타원을 가꾸는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광주일보사
협찬: 삼성생명 POSCO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특별기획, 식물 유기체모를 주춧돌

IOPE